

POSTECH · POSRI

코리아 리포트

Vol. 02

2019 한반도 평화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비전과 과제

한반도는 지금

2019 남북관계와 북미협상 전망
Prospects for Korean Peninsula
독일과 유럽에서 본 한반도

Focus on

ECSC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북한 철도의 현황과 전망
북한 철강산업 현황과 과제

Issue & Column

제재 속의 북한경제
북한 스포츠 현황과 교류 전망
북한의 IT & 대학

With POSCO

Creative Think Leader in Steel and Beyond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인 전략제시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posco
포스코경영연구원

CONTENTS



한반도는 지금

- 04 2019년 남북관계 전망
- 06 Prospects for a Transformed Korean Peninsula in 2019
- 08 독일과 유럽에 도착한 한반도발 평화의 바람



News Briefing

- 10 남북 관계 일지 (2018년 4분기)
- 11 Keyword & Briefing

좌담

- 12 2019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Focus on

- 1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주는 교훈
- 20 북한 철도의 현황과 전망
- 23 북한 철강산업 현황과 당면 과제

Issue & Column

- 25 제재 속 북한 경제
- 28 북한의 스포츠현황과 남북스포츠교류 전망



Zoom in

- 30 남북협력기금
- 32 북한의 IT & 대학

Culture

- 34 영화로 만나는 북한
- 35 New Books



현황 및 통계

- 36 2018년 4분기

소식 & 알림

- 38 제1회 포스텍·포스리 평화포럼 개최

코리아리포트 2019년 Spring (통권 2호)

발행인 송호근

편집인 박명규

발행처 포스텍평화연구소

발행일 2019. 2. 15.

편집위원 최대석, 김병로, 양문수, 김리원

디자인·인쇄 지음디자인

2019년 남북관계 전망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원만한 남북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관계도 순항할 것이다...
2018년에 만들어진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 성과를 거두고,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돌파구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올 한 해이다.

2019년 남북관계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만큼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화두이다.

실제로 남북관계라고 해서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 거의 모든 교류와 협력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경제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5·24 조치와 같은 우리의 독자적인 경제제재조차 우리 마음대로 해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공조체제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탓이다. 자칫하면 우리까지 제재 받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우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북한 비핵화는 진전되어 나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천명하였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유화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여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며,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것처럼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미 메시지는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년사가 북한주민들을 향한 대

내 선전의 목적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도 2019년 벽두부터 전개되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호응하고 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2월 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 역시 미국이 희망해 오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나오자 중국 관영 CCTV는 작년 6월에 나온 '전 세계의 관심사'라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므로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원만한 남북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관계도 순항할 것이다. 설령 북미협상이 교착되는 경우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비핵화와 제재보장을 교환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북한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다고 해서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도 클 것이다. 경제제재 효과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경우 북한 정권이 감내할 수 없는 경제난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등짐의 하중에 눌린 낙타는 마지막에 올려놓은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털썩 주저앉는다는 말처럼 제재가 강화된다면 북한경제는 돌연

붕괴의 조짐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미국이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군사적 공격을 단행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대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 현장 공개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등의 저강도 도발을 하거나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이에 반발하여 제재 강화 등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가 결정된다면 우리 정부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북미 및 남북관계가 악화보다는 호전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북미 양국의 협상 과정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8년 한반도 상황 변화의 근본적 요인의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었다. 이미 언급했지만, 변화의 시작은 북한의 신년사에서부터 감지되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된 것이 주요했다. 하지만 주요 국면마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우선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루었다. 과거 북한은 핵문제가 북미 간 사안이라며 한국과 대화를 기피해왔다. 하지만 2018년 남북 간에는 핵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 문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문서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첫 번째 사례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수순을 밟았다. 더욱이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심성이 부각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었다. 5월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한 달만인 5월 26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5월 26일의 정상회담은 전례와 의전을 무시한 실무적 회담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6·12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8월 말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는 등 비핵화 실무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북미 협상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19년의 국면에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19년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3~4월에는 이미 합의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켜야 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보다 진전된 과감한 추가 조치를 설득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방관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2019년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2019년 내에 비핵화의 큰 줄기가 잡히지 않는 경우 북한 비핵화는 상당 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질 것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은 북한에게도 비핵화 행보를 더디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에 만들어진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 성과를 거두고,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돌파구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올 한 해이다.



조동호

- U. of Pennsylvania 대학원 경제학박사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 역임

Prospects for a Transformed Korean Peninsula in 2019

Scott Snyder (CFR, Senior Fellow)

Unprecedented North Korean diplomatic activity has opened the door to a transition from the looming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to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Jong-un's New Year's speech and subsequent visit to China indicate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pursue its strategic objectives of enhancing its security and prosperity through diplomacy. Kim Jong-un, however, has still made no tangible demonstration of intent to embrace denuclearization, or to trade the nuclear deterrent for normalize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he Korean Peninsula appears to be on the cusp of transformational change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yet the underlying strategic realities that have defined the Korean Peninsula stand off remain unchanged. This seeming contradiction will test the ability of strategists to respond to potentially transformative developments, while avoiding the risk of being misled where hopes for change remain unrealized.

For South Korea, the critical challenge revolves around opportunities to pursue North Korean threat reduction while cultivating an enduring peace on the peninsula. Until such a peace is achieve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depend on the United States to supply a robust security guarantee and economic partnership as an insurance policy against North Korea's possible reversion to hostility, and as a mechanism to preserve the stable, open markets that have enabled Korea's economic success. The U.S.-ROK alliance also remains a necessary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China might use its expanded regional influence to pursue its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its less powerful neighbors. South Korea's final challenge will be to secure assurances that American commitments to South Korean defense remain durable, even under a president who believes that such commitments enable free-riding by alliance partners.

전례 없는 북한의 외교 활동으로 인해 군사 충돌의 현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던 상황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전망할 전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金正은의 신년사 연설과 뒤이은 중국 방문은 북한이 외교를 통해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정은은 여전히 비핵화를 받아들이거나 핵 억지력을 정상화된 정치경제적 관계와 교환하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환적 변화의 기회를 맞이한 듯 보이지만 한반도를 규정해왔던 근본적인 전략적 현실은 변하지 않은 채 엄존하고 있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략가들의 대응능력은 계속 시험대상이 될 것이다. 즉 변화로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면서 전환적 발전을 가져올 잠재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능력 말이다.

한국에게 있어 핵심적인 도전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 감소를 추구할 기회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있다. 그러한 평화가 성취될 때까지 남한은 특정한 안보 보장자면서 경제 파트너로서의 미국에 계속 의존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적대행위로의 복귀를 막을 보험 증서 이면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가능케 한 안정되고 개방된 시장을 보전할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주변국들을 회생시키면서까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장시킬 가능성에 대한 필수적 대비책으로 지속될 것이다. 한국에게 마지막 도전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참여가 지속적이며, 심지어 그러한 약속이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 대통령 하에서도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Kim Jong-un must walk an even more challenging double tight-rope in his effort to normalize relations and achieve peace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holding out until the latest possible moment on denuclearization. To do so, he seeks to bolster the appearance of support from China to enhance his bargaining power over the United States, while also drawing closer to South Korea, preferably by driving a wedge into the U.S.-ROK alliance.

In his meetings with Kim Jong-un, Xi Jinping continue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press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while working with North Korea to utilize tension reduction as a lever by which to diminish U.S. presence and influence in the region. Grow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put the ability of the two major powers to cooperate on North Korea at risk, but many still see shared interest on the North Korea issue as the single most promising buffer against the risk of a full-scale cold-war style confront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President Trump would like to make peace with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has voiced his enthusiastic support for Kim Jong-un as a leader who can make this happen. Worries persist, however, that Trump may recognize Kim's legitimacy while allowing North Korea to remain a nuclear state. Trump has demanded greater compensation for the presence U.S. Forces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out an increased pay-in from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willing to roll back forces. The removal of the U.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 major obstacle to unification that North Korean leaders previously could only dream about, has begun to look plausible.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supporting inter-Korean peace building, but any peace built at the expense of denuclearization will be unsustainable.

For decades, the peace eq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sembled a jumble of mismatched puzzle pieces. Though the players have located many of the missing pieces, it is unclear whether they will actually be able to put these pieces together. And,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despite progress, someone will upend the board and send everyone else back to square one.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더욱 도전적인 이중 줄타기 행보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급적 한미동맹에 틈새를 내면서 한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여러 번에 걸친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동시에 긴장완화 조치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조조가 북한에 대한 양대 강대국의 협력을 불확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문제에 대한 워싱턴과 베이징의 공통된 이해가 두 강대국 사이의 절면적인 냉전형 대결 위험을 막는 유일하고도 가장 유망한 완충장치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한 북한과 평화를 만들고 싶어하며, 김정은이 이를 가능케 할 지도자라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남아 있는 것을 허용하면서 김정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방위비 인상이 없을 경우 병력을 철수시키려 할 수도 있다. 북한 지도부로서는 이전에 꿈으로나 생각할 수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철수, 즉 통일의 핵심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볼지 모른다. 미국은 남북한의 평화 구축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비핵화를 훼손시키면서 만들어진 평화는 어떤 것이든 지속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 방정식은 잘 들어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뒤엉킨 모습이었다. 플레이어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조각들을 많이 찾아냈지만 그들이 실제로 이 조각들을 잘 맞추어낼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진전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판을 뒤집어서 모든 사람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보낼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 Scott Snyder is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author of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
- 스코트 스나이더는 미국 외교협회 한국학 수석연구원이며 [기रो에 선 대한민국 : 패권경쟁 시대에서의 자주와 동맹]의 저자이다.

독일과 유럽에 도착한 한반도발 평화의 바람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2018년 독일에서 개최된 글로벌 코리아 포럼 (이은정 교수 제공)]

분단을 극복한 베를린은 남북한 대표의 만남이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곳이다.

2019년 1월 10일 베를린에서 세계핸드볼 선수권대회 개막경기가 열렸다. 남북한 단일팀과 독일의 경기였다. 관중석에는 독일 대통령과 베를린 주재 남북한 대사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다. 2018년 1월 초 한스 모드로우, 전 동독 총리의 90세 기념행사에서 처음 만난 이후 몇 차례 함께 만난 두 대사는 스스럼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벽이 붕괴하기 전 동서독의 대표들의 만남과 같이 이들의 만남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남북한 대표의 만남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는, 정치적으로 일상적인 것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2019년이 시작되면서 핸드볼 단일팀과 함께 베를린에 도착한 한반도발 평화의 바람이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력한 경제 일변도로 이어졌던 유럽, 특히 독

일과 프랑스, 영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유럽과 독일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불신은 2018년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경제완화를 요청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강하다. 독일의 외교관 중에는 2015년 10월에 대규모 민간기구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서 북한 쪽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회의를 가질 정도로 양국 간의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던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로 북한을 보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외교관들은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독일의 민간 단체들에게 2016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질책하듯이 되묻는다. 2015/16년에 북한이 자신들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보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의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은 유럽연합이 유엔보다 더 강력하다. 독일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대북제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 학술, 의료 분야의 교류까지도 북한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인도주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는 유럽연합과 독일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2019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외교 관료들보다 더 고집스럽게 대북정책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집하던 독일 외교관들도 한반도발 평화의 바람을 제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12월까지도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에 독일이 적어도 결립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던 독일 외교관들이 베를린에서 열린 남북한 단일팀의 만남의 장에서 함께 즐기고, 기뻐한다. 유럽과 독일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쇠귀에 경 읽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단순한 학술 문화 교류를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역할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연합 외교의 변화는 아주 느리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마치 커다란 항공모함과 같아서, 안전하게 운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천천히 방향을 전환하고, 원하는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019년이 유럽연합과 독일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너무 성급한 것이라는 신호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독일이 2016년 이후 견지해 온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교적 영향력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설득해서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을 주도했던 게아하르트 슈뢰더 전 수상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통일을 경험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이 평양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유럽과 독일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테이블에 주역이었던 적은 없지만 유럽과 독일은 많은 경우 건설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지금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새롭게 짜여지는 국제협력의 틀에서 유럽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8 한독통일자문회의' (박영규 교수 제공)]

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1990년대 제네바 협상을 경험한 독일의 외교관들은 KEDO 경수로사업에서 유럽과 독일은 단순히 비용만 담당했을 뿐, 제네바 협상 외에 한반도 관련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독일과 유럽이 동아시아와 관련된 협상에서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만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일과 유럽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 반면, 적어도 과거 냉전과 분단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적 대화의 장을 구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이제라도 유럽연합과 독일도 일방적인 대북 압박정책에서 벗어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유럽 국가들처럼 북한과의 대화의 장에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분단을 극복한 베를린은 남북한 대표의 만남이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의지만 있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그런 의지가 싹트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다. 2019년 초,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 단일팀과 함께 한반도발 평화의 바람이 베를린에 도착한 것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지금은 이 바람이 불까지 기분 좋은 훈풍으로 발전하고, 앞으로도 평화의 바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은정

- 독일 괴팅겐 대학교 정치학박사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구 프러시아 왕립학술원) 정회원
- 할레대학교 정치학 교수자격 (Habilitation)

남북 관계 일정

2018년 4분기

날 짜	내 용
2018년 10월	1일 JSA 및 유해 공동발굴 지역 내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 개시
	4일 10. 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 10. 6, 평양 인민문화궁전)
	15일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
	18일 문 대통령, 바티칸 방문 및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 전달
	22일 제2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22일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 12. 10)
26일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날 짜	내 용
2018년 11월	1일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단
	2일 남북 체육 분과회담
	5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 12. 9)
	7일 남북 보건의로 분과회담
	10일 시범철수 GP 화기·장비·병력 철수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
	23일 남북 통신 실무회담
	30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 12. 6, 개성~신의주)
	30일 유해 공동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시범철수 GP 시설물 완전 파괴 완료

날 짜	내 용
2018년 12월	8일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 12. 7, 금강산~두만강)
	12일 남북 보건의로 실무회의
	12일 시범철수 GP 남북 공동 검증
	13일 철도·도로 착공식 관련 남북 실무회의
	14일 제2차 남북 체육 분과회담
	21일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 12. 23, 고성~원산)
	24일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개성 지역)
	26일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30일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날 짜	내 용
2019년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방중(1. 7~10) 및 제4차 북중 정상회담
	18일 북미 고위급회담(김영철-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면담
	19일 북미 실무협상 (~ 1. 21, 스웨덴 스톡홀름)

Keyword & Briefing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착공식
#유엔·미국독자제재예외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열차 (사진 : 통일부)]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 독자 제재예외 인정을 받고 11월 30일~12월 17일 기간 동안 남북 철도(경의선, 동해선) 연결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12월 21일~23일에는 동해선 도로를, 12월 24일에는 지난 8월에 이어 개성 지역의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마쳤다. 남북은 조사를 마치고 12월 26일 북측 개성 관문역에서 남북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군사분야합의서 #GP시범철수 #JSA비무장화 #적대행위전면중단
#지뢰·폭발물제거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 (사진 : 통일부)]

남북은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JSA 및 강원도 철원 등 유해발굴 시범지역 내에서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4단계에 따라 모든 화기·장비 철수(11월 10일) → 근무인원 철수(11월 10일) → GP 시설물 완전 파괴(11월 30일) → 상호 검증(12월 12일)을 진행하였다.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는 완전 파괴되었으며,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하였다.

#문재인대통령 #유류순방 #바티칸방문 #교황면담
#교황방북초청의사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유류 정상회의(ASEM)에 참석차 10월 13~21일 간 유류순방을 하던 중 10월 18일 교황청에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 문 대통령은 교황과

의 면담 중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하였고,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 충분히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남북교류 #개성만월대공동발굴 #산림·보건의로분야협력



[북측 전달되는 방제약제 (사진 : 통일부)]

남북은 2015년 중단되었던 고려 공평터인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발굴을 10월 22일 재개하였다. 또한 남북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력을 위해 10월 22일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실시하고 11월 29일 남측에서 북측에 방제약제 50톤을 전달하였으며 12월 11~13일 남측 전문가들이 평양에 방문하여 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등 관련 현장을 둘러보았다. 보건의로 분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11월 17일과 12월 12일에 보건의로 분과회담 및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남북 간 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정보를 시험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10월 4~6일 평양에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11월 18~19일 금강산에서는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가 남북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스포츠교류 #남북체육분과회담 #합동훈련 #올림픽공동개최
#남북단일팀

체육 분야에서 남북교류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0월 25일~11월 3일 아리스포크립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석차 북한 선수단이 춘천·인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10월 30일~11월 3일에는 남측의 세계태권도연맹(WT) 총체단 및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공연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12월 11~17일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탁구연맹(ITTF)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제26회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남북 남자핸드볼 단일팀이 12월 22일부터 합동훈련을 개시하였다.

또한 남북은 11월 2일과 12월 14일 남북 체육 분과회담을 열고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빠른 시일 내 IOC에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2020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합동훈련, 2020 패럴림픽 공동진출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9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2019년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1월 14일 포스텍 평화연구소는 박명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과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 (전 주일대사)을 모시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쟁점을 포괄적으로 짚은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왼쪽부터 신각수 前 주일대사,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박명규 교수]

박명규 서울대 교수 (이하 박 교수) : 2019년을 전망하는 좌담회에 두 분의 최고 전문가를 모실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2018년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이 연이은 엄청난 변화의 해였다. 센토사 합의 이후 교착국면이 지속되었는데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미 간 실무협상도 진행되었다. 먼저 2018년의 흐름과 후반기 지체국면의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이하 이 장관) : 2018년은 전쟁 국면까지 갔던 한반도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한 해였다.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으로 한반도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제거되었

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되면서 북한을 자극하던 요인이 완화되었으며 남북간 중대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중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10년이 걸려도 되기 어려울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극적 전환이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으로 바뀐 것이다. 센토사 성명 이후 교착관계가 지속된 이유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교적 큰 조건들을 선행조치로 내놓았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불만 때문이라 본다. 북미 간 협상은 기본적으로 불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뢰기반 관계 형성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하는데서 시행착오나 지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신각수 前 주일본 대사 (이하 신 대사) : 남북관계가 2017년 대결 모드에서 2018년 교섭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긴장 완화에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핵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제된 상태로 2018년 끝까지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현 남북관계의 진전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착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진정한 핵 폐기 의사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고 있는지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데 있다. 2019년에는 남북관계 진전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핵 폐기의 진전이다. F-35 도입과 관련해 국방 당국이 신경을 쓴다는 언론 보도만 봐도 군사분야협약이 우리 군사안보태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박 교수 : 두 분 모두 2018년 남북화해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의 전망에 대해 다소 입장이 다르신 것 같다.

이 장관 :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보인 행동도 그 이전과 다르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국방공업이 민간 경제를 위한 생산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 당의 경제집중 노선에 복종하도록 군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북한 군 서열 상위 세 명 모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되어 있어 황병서가 총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그 이전 해와 대조된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초기와 유사하게 주변 정세 안정을 위한 평화 변경 등의 위당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핵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신 대사 : 나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다. 핵 개발·보유가 거의 완성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제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비핵화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쪼개기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를 미국 기득권층과 분리하여 미국의 국익인 핵 동결, ICBM 폐기, 핵 비확산 등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곧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러한 것에 맞춰 움직일 텐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CVID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핵을 머리에 이고 자지 않는 한반도를 위해 대미 외교를 포함 북핵 외교를 잘 해야 한다.

박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불가피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말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신 대사 : 김정은 신년사에는 복선이 많이 깔려있고 모호성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방향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며,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교섭을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가 한반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새로운 길' 언급은 북한이 트럼프를 대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이다. 교섭을 파국으로 이끌 정도로 도발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되돌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할 뿐, 교섭을 포기할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이 장관 : 지난 연말 한 강연에서 '북한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다.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아 교착국면으로 가면 교착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는 것 만해도 북한에게는 제재 국면 속에서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지 않는 한 교착국면으로 가는 것도 낮은 수준의 북한 플랜B라 할 것이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인데 북한은 이 때 여러 조치를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플랜B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지닌 것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 교수 : 조건부 비핵화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조건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해체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 장관 :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과거의 협상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김정은은 한미동맹이 공고하리라는 판단 하에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 동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한미동맹과 같은 북중결맹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 메시지를 북한에게 주고 싶겠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깨질 것이고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자제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조건은 경제체제 완화와 체제안정 보장이다.

신 대사 : 한미동맹이나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포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이 그러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 강하지는 않아도 교섭의 장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걱정되는 부분은 북한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와 체제안전 보장
을 강하게 원한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ICBM과 핵동결 및
사찰에서 북한의 양보와
민생 분야 중심으로
1단계 경제제재 완화를
미국이 수용하는 조치가
교환되는 수준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 장관 —

어떻게 유지할 건지 우리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박 교수 :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이 장관 :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다만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이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다. 과거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능동적이고 미국도 강한 필요성을 느끼므로 북미 간 협의가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해적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특유의 돌파력으로 조야의 불신과 비판에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플러스 알파가 없이는 미국 조야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강하게 원한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ICBM과 핵동결 및 사찰에서 북한의 일정한 양보와 민생 분야 중심으로 1단계 경제제재 완화를 미국이 수용하는 조치가 교환되는 수준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α를 미국 정부가 조율 과정에서 받을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미국 조야가 받아들일 건지는 잘 모르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NATO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북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최대의 전략자산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투부대는 9개월마다 교대가 되므로 훈련을 안 하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 연합 훈련을 안 할 경우 한미 연합 방어태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리비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핵 신고서 제출일 것이다.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는 단계에서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드맵 합의보다 핵 신고서 제출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신 대사 :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건이나 폼페이오 선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고위 협상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디테일이다. 비핵화는 양국이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 만큼 그동안 북한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분명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α가 있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 순방 중 어제(1월 13일) 미국 국악을 우선한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ICBM이나 핵 동결·비확산 문제일 것이다. 핵 폐기 이전에 동결이나 비확산이 합의될 수 있지만 사찰에 의한 검증과 시한 설정 로드맵이 초동조치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맞춘 상응조치로는 가급적 비경제적 조치인 인도적 지원, 체육·문화교류, 북한의 개혁·개방 준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제재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은 남북 관계에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다. 다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갖고 있는 미국을 통해 협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로서 미국을 통해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박 교수 : 북미 간 협상과정의 디테일한 논의에 한국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수록 비핵화 과정의 최종 상태를 공유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충분히 또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장관 : 우리 정부도 로드맵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중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많았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상에 관여할 입지가 있어야 하는데, 1차에 비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우리가 관여할 여지는 적어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하여 진일보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이번 2차 회담에서 북미가 직접 협상할 범위가 넓어졌다. 로드맵을 논의하는 것에 북한이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지만 김정은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로드맵을 만들어도 지

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리비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핵 신고서 제출일 것이다.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는 단계에서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드맵 합의보다 핵 신고서 제출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신 대사 : 북한의 핵 폐기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본다. 1, 2차 핵 위기 때는 북한의 핵 능력이 초기 단계여서 교섭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핵 무력이 완성에 가까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을지 의문이 든다. 양측 간에 로드맵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만 이번에 로드맵 합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한미 간 정책협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대통령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와 이익 그룹이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또 한미워킹그룹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통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움직이지 않는가를 생각하기보다 국무성과 국방성, 여러 쟁점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미국 사회에 투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트럼프의 행동반경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외교노력을 해야 한다.

박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하여 네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도 극진히 예우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가?

이 장관 :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중은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적인 이익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연안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과거의 중화화공업 기지였던 동북 3성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행되면 성장 잠재력이 크다. 중국 중앙 정부는 2015년부터 동북진흥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동북 3성 지역을 연안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중국이 북한과 다시 결맹에 가까운 관계로 가는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대외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0년 북한이 중국과 개방개혁에 대해서 전면적 합의를 했고 나진·선봉과 위화도·황금평 경제

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디테일이다.
비핵화는 양국이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
만큼 그동안 북한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분명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α가 있어야 한다.
— 신 대사 —

특구에서 중국이 북한과 공동개발, 관리 하도록 했다. 북한의 시장경제와 개방, 비핵화 모두 한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4차 방중과 관련된 북한 보도문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전 방중과 달리 김정은과 시진핑이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용을 내용들을 공동으로 검토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추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중국에게 책임을 돌릴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게 방북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해졌는데, 시진핑이 가는 시기는 북한 정권에 매우 중요하다. 북미협상이 잘못되면 모든 일정이 틀어질 수 있는데, 책임회피가 어려운 시진핑이 방북 계획을 통보했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에서 조금 더 나아갈 것을 전망케 한다. 중국은 북미 협상이 잘 되면 중국 역할론을 꺼낼 것이다.

신 대사 : 4차 방중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한편으로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입장이 같았고 제재 완화 이행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대결이 중장기적으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김정은이 방중시 북미회담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신각수 前 주일본대사]

갔을 것이다. 그리고 북중 간 교섭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박 교수 : 신년사에서 다자협의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이 장관 : 이것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이야기이다. 종전선언의 중요성이나 의미는 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과 9 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했는데, 이미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이 되었다고 보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종전선언 자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수순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가변적으로 상황에 따라 평화협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4자 협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9.19 성명 이후 한미 워킹 그룹 레벨에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논의가 준비되었다. 그때 저와 김숙 대사 등이 함께 그 일을 하였는데, 미국이 9.19 성명 전에 반기문 장관을 통해 이러한 의향이 있다고 전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과 함께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협상시 과거의 경험을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신 대사 :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북한이 바라보는 종전선언의 값어치가 지난 해 중반에 비해 떨어졌다. 종전선언의 경우 중국이 참여할 명분이 없다. 종전선언은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은 교전관계에 있던 한국 및 미국과 이미 외교관계를 수교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제약이 있다. 신년사에서 북한은 다자적 평화협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선언은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러한 다자적 평화협상에 대해 한미가 옹호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로드맵 속에서 타이밍을 정해야 한다. 과거 90년대 말 4자 회담이 4차례 진행되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을 교훈 삼아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



[박명규 교수]

박 교수 :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상호관계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한다.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평화 상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적대관계를 해소한 평화상태의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규율할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이 장관 : 평화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므로 통일과 평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원래 통일방안이 체제 경쟁 시대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동료들과 대북, 통일 정책을 만들면서 통일방안을 내지 않고 평화체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평화를 확장시키면서 교류 협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천적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화국면이 안착된 후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남북이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의 경우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 확실해졌다.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남북연합국가를 만들자고 할 수 있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류와 협력의 수준이 훨씬 더 진전된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왕조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서 남북연합국가 체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이 2개의 주권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로 나아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당연히 강압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남북이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은 5000년 동안 함께 살았던 DNA로 결국 하나로 결합될 것이다.

신 대사 : 통일과 평화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단국의 숙명은 통일이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통일은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은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분위기상 통일이라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평화구축에 우선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통일이 강조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로서 평화와 통일은 같이 가야 한다.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가 이루어진 상태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그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관계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북통합 차원에서 많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실용주의적 통일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모순을 고쳐야 한다. 남북관계는 크게 헌법, 남북관계법, 국제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율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순이 많다.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에 공통점을 두고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헌법에 권한을 주고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규범들을 헌법과 맞출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없이는 통일이 없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근본가치에 맞춰 북한이 변화를 해줘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만들어 국내적으로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통일외교를 해야 한다.

박 교수 : 대북정책은 늘 우리 사회 내부에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어 왔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부탁드린다.

이 장관 :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은 분단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고 매 정부마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두 가지 객관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연동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결국 비핵화의 진전이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사회 분열의 꿈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핵 문제를 넘어 북한의 개혁이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사회의 북한 인식에 대한 간극이 좁아질 것이고 그것이 남남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신 대사 :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남남갈등으로 국민통합과 소통에 문제가 있고 대립이 심해지면서 국익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나 언론들을 중심으로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플랫폼을 만들거나, 지금의 진보 정권이 보수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면 문제들의 본질적 해결은 어려우나 완화될 것으로 본다. 대외정책의 핵심은 분단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인해 우리 외교가 제대로 가치를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북한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박 교수 : 마지막으로 기업을 비롯하여 책임 있는 비정부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함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린다.

이 장관 : 김정은이 비핵화로 나오는 진정한 이유는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체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북한과 경쟁시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북한이 이미 개방한 것과 갖고 있는 자원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정치안보적인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원 원천들이 북한에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위명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남북경협 뿐 아니라 동북 3성 등 북방 경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섬나라처럼 폐쇄된 한국 역시 북방으로 나가면서 경제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비핵화 이후 경제를 염두하고 대비하기를 기대한다.

평화상태의 남북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과 남남갈등을 해소 위한 진지한 상호소통과 사회통합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 박 교수 -

신 대사 :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북경협은 철저히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인프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도로 인프라 보다는 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철도·도로 사업은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부패와 연결되기 쉽다. 부패와 결부된 인프라 사업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북한이 개방 후 시장경제로 가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보면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안정된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박 교수 :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활발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책임성 있게 상호소통하고 연대하는 통합력, 중심담론이 미약하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끌 뿐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해소, 역동적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분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주는 교훈

백 훈 (중앙대학교 교수)



[Robert Schuman(1886 - 1963) 사진 : My Country? Europe⁽¹⁾]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자체 홈페이지에 'EU 선구자'(EU Pioneer)로서 14명 남짓한 사람들은 거명하고 있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로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첫 수상을 역임한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949-63년 재임),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941-45, 1951-55년 재임), 프랑스 코냑(Cognac) 지방의 코냑 판매상 출신으로서 유럽연합의 설계자로 알려진 잔 모네(Jean Monnet), 그리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창설자인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이 있다. 로베르 슈망이 'EU 선구자' 목록에 올라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아이디어로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오늘날 유럽연합 EU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왜 하필 석탄과 철강의 공동체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자칫 ECSC가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슈망은 출생부터 '유럽적'(European)이었다. 1866년 룩셈부르크 남부의 룩셈부르크시 안에 있는 클라우센(Clausen)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슈망은, 아버지의 경우는 원래는 프랑스인이었다가 그의 고향인 로레인(Lorraine)이 독일에게 점령되자 국적이 독일로 바뀐 사람이다. 또 그의 어머니는 룩셈부르크 사람이다. 슈망 자신도 태어날 때는 독일 국적이었다가,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알사스-로레인(Alsace-Lorraine) 지역이 프랑스에 반

환되면서 다시 프랑스 국적이 되었다.

슈망은 독일의 본, 뮌헨, 베를린 그리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정치사상, 기독교 신학 그리고 통계를 공부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아 변호사가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슈망은 정치에 입문하여 2차 세계대전과 함께 프랑스 정부의 각료가 된다. 전쟁 중에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던 중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후, 가까스로 탈출하여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 내에서 활동했다. 전쟁 후에는 프랑스 재무장관과 수상을 지냈으며, 외무장관으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시발점이 된 유명한 '슈망 플랜'(Schuman Plan)을 제창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된다.

1950년 5월 파리의 세느 강변의 외무성 건물에 소재한 케도르세(Quai d'Orsay)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슈망 선언' 연설에서 슈망은 유럽의 석탄과 철강 생산을 초국적(supranational) 기구인 'High Authority'(HA)의 관리 하에 두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게 된다. 여기서 '초국적'의 뜻은 모든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했다. 이는 주권을 유지하는 형태인 '정부 간'(inter-governmental) 기구만을 머리 속에 두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사실은 슈망 선언의 초안은 잔 모네의 작품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하필이면 '석탄'과 '철강'을 초국적 감독기구의 관리 하에 두게 되었는가이다. 흔히들 유럽 통합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된 것은 이야기하지만, 이 공동체가 원래부터 에너지와 자원의 협력을 통해서 유럽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로 가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주 절박하였던 문제, 이른바 '독일문제'(German Question)를 해결하기 위한 슈망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을 고민에 빠지게 했던 점이 바로 독일의 재건 문제였다. 독일이 다시 부강한 국가가 되면, 유럽은 또 다른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독일 없이는 유럽에 대한 새로운 위협, 즉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점이 유럽인들의 정치적 딜레마였다.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와 싸운 포에니 전쟁(264 BCE to 146 BCE)에서 승리한 로마가 카르타고의 논밭에 소금을 뿌려 다시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독일의 생산시설을 모두 파괴하여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지만 슈망은 이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당시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자원, 즉 석탄과 철강을 초국적 기구인 HA의 감독 하에 둘으로써 독일의 패권적 전쟁 역량을 제어하고 동시에 독일을 산업화된 유럽에 포함함으로써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다.

1951년의 파리협약에 최초 6개국(베네룩스 3개국과 프랑스, 서독 그리고 이탈리아)이 서명함으로써 2002년까지의 한시적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창설되었고(1952년 발효), 이를 토대로 1958년의 로마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2개의 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었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서 유럽경제공동체는 다시 유럽공동체(EC)로 발전하면서 이를 포괄하는 유럽연합(EU)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슈망 선언'이 이루어졌던 1950년 5월 9일을 '유럽의 날'(Europe Day)로 명명하여 지금도 슈망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지난 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전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 제안에서 '유럽 6개국이 전쟁방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창설

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EU의 모체가 된 것처럼 철도공동체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럽 6개국이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에너지공동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부정확한 이해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발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포함된 6개 국가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의 주요 언론매체에 나타난 반응을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가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느낌도 든다. 남북한은 미국 정부의 경제 속에서도 철도 연결 기공식을 거행하였지만, 그 외의 국가들의 반응은 거의 없거나 차가운 실정이다. 사전에 이들 관련 국가들과 깊이 있는 교감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일본의 한 언론에서 내놓은 논평에는 유럽의 통합 사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이 있어 보인다. 이 논평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이러한 구상은 이미 김대중 정권 이후에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최대 38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불분명하며,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나라의 기업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통하여 이 지역이 통합되어 평화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의 경우 소련의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하여 미국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2차 대전 후 분단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슈망의 지혜로 탄생한 '유럽의 기적'이었다. 유럽의 성공적인 사례를 단순히 '에너지자원의 공동체'로 오해한다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극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슈망의 경우처럼 훌륭한 정치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헌신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훈

-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및 정치경제학과 교수 (1993년 9월~현재)
- 미국 노던일리노이즈 대학 초빙교수 (1991년 8~12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교육분과)

(1) <https://mycountryeurope.com/history/european-coal-steel-community/>

북한 철도의 현황과 전망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한반도의 끊어진 혈관을
연결하는 단순한
외과수술이 아니다.
남북, 동북아시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랜드 브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국인 삽화가 핸드포드의 [월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빨간 줄무늬 옷차림의 소년 <월리>를 찾아내는 게임용 그림책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월리> 대신 <열차를 찾아라> 게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열차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때면, 그 북한 열차를 찾기 위한 소동이 마치 책 속의 <월리> 찾기 게임과도 흡사하다.

재조명되는 북한 철도

최근 북한철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작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북한과의 철도의 연결을 비롯하여, 철도를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약 1,200km에 달하는 사업구간에 대한 철도공동조사와 착공식도 진행되었다.

북한에서 철도는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을까? 북한에서 철도는 여러 운송수단 중의 하나가 아니다. 생전에 김일성은 철도 운영을 인체에 비유하여 혈액이 순환되는 것과 같으며,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많은 북한의 법규 가운데서 혁명의 전취물, 싸워서 뺏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와 철도뿐이다. 즉 북한 철도법 제1조에서는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긍심과 자존감의 상징인 철도가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그 실상이 공개되고, 남북 협력의 주 대상사업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수도인 평양-베이징 간 국제열차이다. 이 열차는 북한 구간인 평양-신의주간 225km를 4시간 54분에 주행하고 있으며,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45km 수준이다. 언덕 위에서 내리막길로 달리는 자전거의 속도와 비슷하다. 북한 지역을 달리는 일반 여객열차의 표정속도는 시속 2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국제 마라톤대회 메달리스트들이 뛰는 속도와 열추 비슷하다.

북한 철도의 현실

UN ESCAP(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는 화물철도가 국제운송회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일 1,000km(시속 40km 이상)로 주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여객열차가 시속 20km 수준인 북한에서 느림보 화물열차가 국제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014년, 북한 노동신문에 철도성의 자랑스러운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황해남도과 개성시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긴급하게 수송해야 하는 과업이 발생했다고 한다. 화차 6량 분량의 화물이었으나, 화차 부족으로 수송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철도성에서 3일 낮과 밤을 지새운 수송전투를 통해 화차 6량을 긴급 수배하였으며, 마침내 화물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는 소위 영웅적인 내용이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저개발국 사례가 아닌 남측 도라산역에서 7km 떨어진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통계 수치상의 북한 철도는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87km로서 남측의 1.3배이며, 전철화율은 남측의 1.1배인 81%에 달한다. 여객용 객차는 2,200여 대로서 남측의 2.4배인 반면, 화차는 10,900여 대로 남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관차도 1,200여 대로서 남측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치를 뒤집어 해석하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철도가 주가 되고, 도로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철종도(主鐵從道) 시스템이라는 점, 북한의 높은 전철화율이 고질적인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운송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여객차량은 과잉 상태이며 화물차량은 태부족이라는 점, 동력차량인 기관차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철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철도가 대량수송, 규칙적인 수송이 가능하며 수송시간이 짧고 수송원가가 싼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 전기기관차의 평균전원증량은 약 1,300톤으로 북한 연안해운의 평균적재능력인 1,000톤보다 1.3배 높으며, 철도의 수송원가는 자동차의 34%, 해상운송의 5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 철도화물의 평균 수송거리의 약 160km로서 자동차 화물운송거리의 15배, 연안 해운의 1.7배에 달한다. 철도가 주력운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북한 철도는 동아시아 국제운송회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 철도는 중국과 3개 노선(신의주-단둥, 만포-지안, 남양-투먼), 러시아와 1개 노선(두만강-하산)이 연결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밖에 3개 노선(훈춘-훈춘, 삼삼봉-카이산탄, 청수-상하

구)를 포함하는 총 6개의 중국 연계 국제철도망이 가동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철도는 주변국의 끊임없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1998년부터 나진-남양-투먼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 중국 국가급 계획으로 격상된 창치투 개발계획에서는 대외운송로로서 북한의 청진, 무산, 나진을 연계하는 국제철도노선 건설 및 현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는 2001년에 북한과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북한철도를 매개로 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한반도종단철도(TSR)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2001년부터 북한내 3개 노선(두만강-나진-홍남-고원-평강 노선, 원산-금강산 노선, 나진-하산 노선)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북-러간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나진-하산간 54km의 철도를 건설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내륙의 석탄을 나진항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운송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북한 철도의 미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철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북한 지도부가 바라보는 북한철도의 위상은 엄청난 돈벌이가 가능한 운송수단이다. 김일성은 사망하기 8일 전인 1994년도 6월 30일,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한다. 남북이 협력을 하면 돈벌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의선을 현대화하여 중국 상품을 남쪽으로 날라주면 연간 4억 달러, 동해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상품을 운반하면 10억 달러의 운송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철도가 단순한 자국 내 운송수단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제운송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라시아지역에는 사회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철도운송 관련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1956년에 구소련 체제하에서 결성되어 북한을 포함한 2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OSJD라는 기구이다. 유라시아대륙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에서 하나의 운송장으로 화물과 여객운송이 가능하며, 기구 본부에서 연말에 운임에 운임을 정하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물/여객 협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 만장일치가 회원 가입 조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 신청은 늘 북한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다. 그런데 작년 6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한국의 OSJD

북한 철강산업 현황과 당면 과제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가입을 찬성하여 금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회원국의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동유럽의 알바니아에서부터 카리브해 쿠바까지 국제철도운송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철도 현대화에 대한 북한의 획기적인 입장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15년에 북한은 금강산-원산간 118km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국제투자 유치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안서에서는 해당 구간의 상세한 사업 내용과 B/C 분석 결과치를 공표하였다. 또한 사업 주체는 철도성이 아닌 동해철도연운회사라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이자, 북한 자료에서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할인율 등이 제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북한 평양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유료화로 개시되었다고 한다. 100km당 2유로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요금은 현금이 아닌 미래카드라는 통행료 지불 전용카드(2,5유로)를 구입하여 충전

한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의 통행료 징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한반도의 끊어진 혈관을 연결하는 단순한 외과수술이 아니다. 남북, 동북아시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Land Bridge를 구축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이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들이 고속철도를 탑승하였다. 시속 40km 철도에 익숙한 그들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고속운송의 괴물을 직접 체험하였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선 철도에 탑승한 독립신문 기자는 철도를 불을 뿜는 마차(火輪車)라고 하면서, '차창에 앉아 밖을 보니 나는 세도 미처 따르지 못한 대'라고 기사를 썼다. 북측 대표단도 거의 비슷한 감동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다. 북한에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은 천리마 시대에서 만리마 시대로 가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며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희망의 씨앗임에 분명하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착공식은 오전 10:00부터 11:00까지 축사(착공사) 및 침묵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착공식에는 남북 각기 100여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남북관계 및 철도·도로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하였다. 또한 개성을 고향에 둔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5명),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신장철, '07.12~'08.12),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참석하였다. 북측은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을 주빈으로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효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측 착공식 참석자들은 06:45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도라산역을 지나 09:00경 개성 판문역에 도착하는 특별 열차 9량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하였으며, 북측 참가자들은 북측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도착하였다.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안병민

- 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북한경제포럼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북한의 철강산업은 1914년 일본 미쓰비시사(三菱社)가 겸이포제철소(현 황해제철소)를 설립하고 1918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미쓰비시사는 1938년 청진제강소도 설립했는데 이는 나중에 김책제철소로 발전했다. 이후 청진제철소, 성진제강소 등이 설립되면서 북한의 철강산업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후 북한은 기존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다. 6.25 전쟁 후에는 피해를 입은 제철소를 복구하면서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는 일관제철소로 확장했다. 1970년대에는 舊소련의 지원을 받아 철강산업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질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북한은 1980년대 제철소들의 설비능력을 확장하고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으나 1980년 말 舊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외부지원이 끊어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까지 경직되어 북한의 고립은 심해졌고 북한 철강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국에서 최신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철강산업을 재건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코크스 수입이 어려웠고 또 노후된 설비와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철강산업 정체는 지속되었다. 이에 북한은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의 무연탄을 이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주철 개발에 매달렸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철강산업 발전에 필요한 철광석 매장량은 풍부

북한 철광석은 주로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및 평안남도·평안북도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추정 매장량은 Fe50% 기준으로 약 50억 톤으로 알려졌다. 통계청과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을 50억 톤(Fe50%)로 추정했고 북한 자원연구소는 25억 톤(Fe63.5%), 호주 Clough社は 65억 톤(Fe65%)로 추정했다⁽¹⁾.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인 무산철광산은 매장량이 20억 톤 정도이나 품위는 Fe20~30%로 낮은 편이다. 함경북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의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와는 1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외 북한의 대표적인 철광산 지역으로는 허천에 4.5억 톤(Fe36~50%) 정도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고, 은률 및 재령에 2억 톤(Fe50%) 정도 매장되어 있다⁽²⁾. 2017년 북한의 철광석 생산은 전력 부족 및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574만 톤을 기록했다(통계청).

북한에는 무연탄 45억톤, 갈탄 160억톤이 매장되어 있다. 240여 개의 석탄광이 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한국광물자원공사). 하지만 제철 원료인 코크스는 없어 전량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이후 늘어나 2016년 3,106만 톤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대북제재로 2,166만 톤으로 크게 줄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철강생산 및 설비능력은 지속 정체, 당면 해결과제 다수

북한의 제철소는 전역에 위치해 있는데 제선/제강/압연 등 일관 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는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성진제강소 등이다⁽³⁾. 현재 북한의 조강생산은

(1) 남성욱, "북한 철광석 개발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한 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2014년 하반기 제26권 2호, p.81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 광물자원 자료집", 2012년

(3) 이석기·이승엽, "2000년대 북한기업 동향" 산업연구원, 2014년

제재 속 북한 경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철강사 분포 (자료 : 이석기·이승엽, 2014, 산업연구원)]

100만~120만 톤 수준으로 20년 넘게 정체되어 있다. 설비능력도 600만 톤 정도로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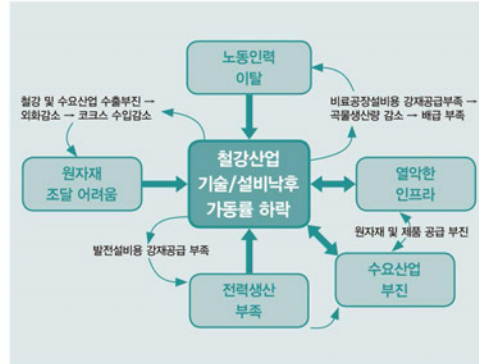
북한 정부는 2010년에 수립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에서 자급자족의 철강산업 재건을 통해 연간 2,000만 톤의 조강 생산을 목표로 설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당면한 여러 과제로 북한은 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첫째, 설비 가동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코크스 부족, 설비 노후화, 열악한 인프라 등이 원인이다. 북한에는 코크스 원료 탄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코크스 수입이 어렵다. 또한 북한의 대부분 설비는 일제와 舊소련의 설비를 개조한 것이지만 자금부족 및 부품 부족 등으로 유지보수가 부진하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물류 운송이 원활하지 못해 원료 조달이 많이 지연된다. 북한은 철도 노선의 90% 이상이 단선이고, 도로 포장 비율이 10% 미만이며, 발전량은 한국의 4.2%에 불과하다(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둘째, 기술 수준이 낮다. 북한의 설비 및 조업기술은 낙후되었고 자동화 수준도 낮다. 고강도 특수강 및 내식강 등은 자체적으로 제조가 어렵고 재래식 압연설비를 가동한다. 현재 북한 철강산업의 기술은 한국의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경제 및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부족하다. 1990~2017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55%이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 낙후, 부품 부족 등으로 연간 생산이 4,000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선산업도 원자재 조달 어려움, 기술 낙후 등으로 생산이 장기간 침체되었다. 북한의 선박보유는 100만톤 정도로 한국의 8%에 불과하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처럼 북한의 철강산업은 설비 노후화, 기술 낙후, 전력 부족, 인



[북한 철강산업 악순환 구조 (자료 : 이석기 외, 2014, 산업연구원)]

프라 열악, 수요 부진, 원자재 조달 어려움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것이 다시 전력생산 부족, 수요산업 부진, 곡물생산 감소 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배급이 줄어든 노동인력이 공장을 이탈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투입과 기술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 철강산업 재건의 전제조건은 대북제재 해소

북한 철강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금, 설비 및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제조건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소다. 현재 미국은 10개 이상의 법률/시행령 및 전략물자수출 통제 등으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한다. 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이고 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으로 사실상 글로벌시장에서 퇴출된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글로벌 기업도 북한에 진출하기 어렵다.

대북제재 해소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과거 미중 관계 및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과정을 참조하면 미국과 북한이 북핵문제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북미수교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기업의 북한 철강산업 진출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로 북한에 진출하는 데는 불확실성 해소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도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 기업의 글로벌 전략, 중국 및 북한 등 연구
- 포스코경영연구원 재직 (2004~현재)

북한은 이해하기 힘든 나라로 생각될 때가 많다. 지금의 경제 상황도 그렇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UN 차원의 본격적 대북제재가 시작된 것은 3년 전인 2016년 초봄이었다.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지만, 2~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평양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피해를 짐작케 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제재에 대해 면역력 또는 내구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제재는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 당국이 제재 영향이 발현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최대한 늘려 당장의 피해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수출(주로 대중국 수출)은 2017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8년(1~11월)에는 제재 이전 대비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수입(주로 대중국 수입)은 2017년까지도 정상적이었고 2018년에는 많이 줄긴 했으나 그래도 과거의 3분의 2 정도로는 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즉 외화벌이가 크게 줄었는데도 북한은 기존 외화보유액을 사용해 상품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원유 수입 제외)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1~11)
수출	금액(억 달러)	28.68	25.68	25.37	17.31	1.92
	증감률 (%)	- 2.0	- 10.5	- 1.2	- 31.8	- 88.5
수입	금액(억 달러)	35.20	29.43	28.41	32.45	20.11
	증감률 (%)	+ 16.1	- 16.4	- 3.5	+ 14.2	- 34.7

자료 : 2014~2017년 수치는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2018. 11. 16. 검색); 2018년 수치는 중국 해관통계(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research>), "월간 북중무역통계 2018년 11월"에서 재인용(2019. 1. 14. 검색)).

주 : 중국 해관은 2014년부터 대북한 원유(HS 2709) 수출을 무역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평균 53만톤 내외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이 표는 원유 수입을 제외한 해관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

2018년에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은 2017년 연말에 UN 안보리가 북한의 중요 상품(전기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정제유(휘발유, 경유 등)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제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수입 금지된 상품은 대부분 투자 사업에 이용되는 자본재여서 당장의 소비 생활과는 큰 상관이 없다. 식량, 식품, 원유, 비료, 각종 소비재 등 북한의 소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타 상품의 수입은 계속 허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 실상

미리부터 절약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 놓은 외화 보유액을 써 가면서 당장의 피해를 모면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외화가 바닥나 더 이상 수입을 못하게 되면 급격한 공급 부족으로 훨씬 극심한 경제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보유액이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대외거래 중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꽤 있고 여기서 얻은 흑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제법 큰 금액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외화보유액이 많다고 지금처럼 대규모 무역적자를 계속 낸다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 당국이 비교적 빨리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남한 및 미국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열던 시기에는 이런 낙관이 꽤 현실적인 전망처럼 생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도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협상이 잘 진행된다 해도 실무적,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제재가 충분히 풀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셋째, 공식적으로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및 러시아의 암묵적 협조 덕분에 제재의 실질

적 집행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북중러 접경지역에서는 제재를 회피하는 밀무역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정세유수입 제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료 부족으로 자동차 운행이 위축되면 운수난으로 전반적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UN 안보리가 정한 한도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계속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북한 내 석유 공급난 소식이 별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점, 북한 선박으로의 불법 환적이 종종 적발 또는 추적당하고 있는 점이 유력한 방증일 수 있다. 정세유 수입 외의 다른 거래에서도 이런 저런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구멍은 어디까지나 구멍일 뿐이어서 제재 효과를 줄일 수는 있어도 충분히 상쇄할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의 거래는 감시와 추적이 쉽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기 어렵다.

넷째,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자립적 생존능력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신감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오늘의 북한 경제는 20년 전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교해 보면 몰라보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식량 사정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에 대한 외부(남한 및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는 크게 줄어 지금은 거의 끊기

북한 경제가 좋아진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한편으로는 시장 및 사경제의 자생적 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무역을 비롯한 대외경협 확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장기간 쌓아올린 성과가 있기에 일시적으로 여건이 나빠져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것이다. 그러나 여건 변화가 장기화되면 추세 자체가 꺾이면서 피해가 크게 증폭될 수 있다.

다시피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UNICE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장기 지속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탈북민의 증언과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소식도 식생활 수준이 나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자체적 식량 공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소비재의 국내 생산이 늘고 품질도 좋아졌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국영 경공업 현대화와 유통망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서 제재가 별 소용없을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북한 경제가 좋아진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장기간 쌓아올린 성과가 있기에 일시적으로 여건이 나빠져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것이다. 그러나 여건 변화가 장기화되면 추세 자체가 꺾이면서 피해가 크게 증폭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전망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북한 경제의 장기적 회복은 한편으로는 시장 및 사경제(개인농업, 개인유통업, 개인운수업 및 기타 사적인 경제활동)의 자생적 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무역을 비롯한 대외경협 확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양대 추세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준 교통·통신 사정 개선은 자동차, 정세유, 휴대폰 등 수입 상품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이들 상품을 사는 데 필요한 외화는 광산물 등 북한산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있었기에 조달할 수 있었다. 국영 산업 현대화와 각종 국책 건설 사업에서는 중국산 기계, 금속 및 건자재의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대외거래가 크게 감소할 경우 대내적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자본재의 수입은 이미 중단되어 투자 및 건설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외화보유액을 소진하고 나면 기타 상품의 수입도 어려워질 것이며, 그 경우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생활수준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제재가 장기화되더라도 식량을 비롯해 최소한의 생존 및 생활을 위한 물자의 자체 공급 능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해지거나 체제가 붕괴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 당국과 주민은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에게 익숙한 내핍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가 지속되며 대외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저발전 수준에서 장기 침체를 감내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경험한 후에 겪게 되는 경제활동 침체와 생활수준 하락은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고통과 실망, 그리고 사기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며 핵 협상에 임하겠지만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 고려사항일 것으로 판단된다.



김석진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LG경제연구원(1997.8 ~ 2005.8), 산업연구원(2005.9 ~ 2013.9)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3.10 ~ 현재),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연구

북한의 스포츠현황과 남북스포츠교류 전망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남북스포츠교류의 가치

강산이 한번 바뀔 시간만큼 국내외 정세가 악화일로였고 긴장감이 팽배했던 10여년의 공백을 깨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다 준 계기가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했던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 주었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낸 스포츠외교의 힘을 보여 준 역사적 사례가 되었다.

남북 두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국제 스포츠대회에 교류를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2018 자카르타아시안게임에서 남북공동입장과 여자농구, 조정, 카누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연이어 탁구, 유도, 핸드볼 종목 등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였고,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분야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일상사처럼 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불이 당겨졌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지속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와는 별개로 자유롭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스포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스포츠 분야가 여타 분야에 가해지는 대북제재에서 다소 자유로운 까닭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스포츠교류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스포츠가 다른 분야와 연계한 교류협력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인적교류 및 접촉을 하게 되고 성과를 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이에 필자는 북한의 스포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스포츠교류를 전망해 본다.

북한의 체육행정 기관

김정은 위원장은 '체육강국 건설'을 앞세워 체육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이다. 북한의 최상위 체육행정기관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당시 실세였던 장성택이 임명되었다.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최룡해에 이어 지금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가 맡고 있으며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은 당·정·군에 총망라한 파위 엘리트 집단으로 인민무력성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체육발전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라면 내각에 소속된 체육성은 체육단체들을 총괄 지도하는 기관이다. 체육성의 수장인 체육상은 당연직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체육상은 김일국이며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주요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이 집중된 평양 청춘거리의 옛 지명이 안골이기 때문에 안골체육촌이라고 불린다. 안골체육촌은 우리나라의 진천선수촌과 같은 종합스포츠단지이다.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량강도 삼지연에는 백두산자구 체육촌이 있다.

북한 최고의 자랑은 능라도 5.1경기장(15만명 수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 규모의 종합 경기장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연설을 한 곳이다. 김일성종합경기장(10만명 수용)은 원래 평양공설운동장이었으나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해 개칭하였다. 양각도 축구장, 평양골프장(18홀), 실내 경기장으로 평양체육관(2만 명 수용), 평양볼링관(40개 레인), 류경정주영체육관 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로 지어진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 만리마시대의 상징적인 스포츠시설이다. 대규모의 군인들과 건설 노동자들이 1년여 만에 스키주로 10개, 면적 1400만㎡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스키장을 완공하면서 마식령속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체육인 칭호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과 성적 향상을 위한 처우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경기 성과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에 따라 공훈체육인(1960년 제정), 체육명수(1965년 제정), 그리고 체육인 최고의 영예인 인민체육인(1966년 제정) 등의 칭호가 있다.

대표적인 인민체육인으로 1972년 뮌헨올림픽(북한이 첫 출전한 하계올림픽) 사격소구경복사 금메달리스트 이호준, 1964년 인스브루크올림픽(북한이 첫 출전한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3000m 은메달리스트 한필화, 1962년 모스크바세계육상대회에서 400m와 800m 우승, 1963년 자카르타 GANEFO대회에서 400m와 800m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불세출의 육상 영웅 신금단 등이 있다. 신금단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했으나 IOC가 GANEFO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금지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일본에서 아버지 신문준과의 10분간의 부녀 만남은 분단의 비극을 실감케 한 일화로 1985년 남북이산 가족 상봉의 계기가 되었다.

체육선수단과 조선체육대학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종합체육단이나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체육선수단에 입단하여 생활하게 된다. 1급 선수단이 15개, 2급 선수단이 40개, 3급 선수단이 8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체육선수단으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내무성체육단으로 출발한 인민보안성 소속의 압록강체육단, 1949년 창설된 인민무력성 소속의 4.25체육단, 평양시체육단, 자동차체육단(경공업성), 기관차체육단(철도성), 조선체육대학 선수단 등이 있으며 종목별 국가대표들이 대부분 이들 선수단에서 선발된다. 또한 마라톤은 건설건설공업성, 탁구는 조선민족보협총회사, 역도는 인민봉사총국, 피겨·빙상은 재정성, 레슬링은 무역성 등이 협회를 맡고 있다.

평양사범대학 체육학과와 신의주교원대학 체육학과를 통합하여 4년제 대학으로 1958년 9월 1일 개교한 조선체육대학은 명실공히 체육 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다. 원래 평양체육대학으로 개교하였으나 1990년 10월 31일 조선체육대학으로 개칭되었다.

남북스포츠교류 전망

남북 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북 단일팀이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내고 세계인을 앞에서 podium에 오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전과 위상을 알리는 스포츠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선

-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
-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역임



[남자 핸드볼 남북 단일팀 (출처: 대한핸드볼협회)]

2019년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0월 평양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 2020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열려 남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잇따라 마련된다.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는 남북 공동개최 의향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한 상태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개최국가에 출전권을 부여하는 남녀 수구종목(남자팀은 남한선수 중심, 여자팀은 북한선수 중심)의 단일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다이빙에서 김국형(인민체육인)과 아시안게임 4번 연속 동메달을 딴 아티스틱 스위밍의 참가가 전망된다. 그러나 경영 종목은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FINA 기준기록에 통과한 선수가 없을 것으로 보아 FINA가 wildcard를 부여해야 출전이 가능할 것이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단일팀 구성 경험이 있는 축구, 탁구, 핸드볼, 여자농구, 유도, 조정, 카누 종목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5년 3월 전국체육인대회 친필 서한에서 언급한 여자 축구, 마라톤, 유도, 권투, 레슬링, 역도, 탁구, 기계체조, 양궁 등 9개 주력 종목의 교류협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교류로 경쟁전 반환, 통일축구, 통일농구, 통일탁구의 정례화가 요망된다.

요컨대 이제는 남북스포츠 교류가 국제무대에 보여주기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나 시혜적인 교류형식에서 탈피하여 남북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를 사회문화,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융합된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이 보다 많은 접촉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한반도 평화의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해 본다.

남북협력기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 지난 12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착공식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정부의 연간 계획에 없었던 일정이었지만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협력기금은 앞서 언급한 착공식 행사와 같이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기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는 남북관계를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공존구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면서 정부는 7·7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1988.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1990. 8)을 제정·공포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1991년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담당기구는 주관부서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한

국수출입은행(기금수탁 관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이 조성된 이래 정부출연금,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국제 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1991~2018년까지의 총 조성액 중 정부출연금이 3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57%를 차지할 만큼 남북협력기금은 두 가지 자기에 의해 대부분 운용된다.

기금은 경상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인적왕래, 사회문화협력, 경제교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한반도미래센터 운영, 이산가족교류, 인도적 지원) 등에 집행되며,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교역경협자금대출이나 경협기반 조성 등에 집행이 된다. 또한 여유자금이 운용되어 필요시 집행된다.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지원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는 내부검토와 필요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사전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한 후, 통일부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



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을 결정한다. 통일부의 기금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집행을 의뢰하고, 수출입은행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며, 기금지원이 완료된 후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기금지원 절차가 완료된다.

2019년 남북협력기금

2018년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간 화해와 교류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2018년 8월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할 것을 논의했다. 확대의 이유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회담 추진 등을 통한 남북 당국 간 소통 활성화 지원, 사회문화교류 및 이산가족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지난 해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을 주요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 원, 남북경제협력에 5044억 원, 사회문화교류에 205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예산에 2951억 원이 반영됐고, 이산가족교류지원을 위한 예산은 395억 원 배정됐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 중에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비용 137억 원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협력에는 725억 원, 산림협력에는 1137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 철거 및 조정,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 등이 중점 편성되었다.

참고

- 통일부 및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18.8), "2019년 활력예산안"
- 기획재정부(18.12.08),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
- 정책브리핑(18.12.10), "내년 예산 469조 6000억 원 확정... 올해보다 9.5% 증가"
- 정책브리핑(19.1.24),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의결"
- 경향신문(18.12.10),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3년만에 1조 원 넘어서... 남북화해 분위기 반영"

2019년 1월 24일 제3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등 8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세부 내용은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약 63억) △2019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약 36억)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약 8억) △2019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약 88억) △2019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 지원(약 27억) △2019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약 62억) △2019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약 1.5조)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에 대한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4,904억 원이다. 기금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1,000억 원, 공자 예수금 1조 1,531억 원, 여유자금 회수 1,395억 원, 여유자금 운용수익금 등 자체수입 977억 원으로 조성된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036억 원(18년 대비 1,443억 원 증액), 공자 원리금 상환 3,039억 원, 기금운영비 27억 원, 여유자금 운용 801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2013년 26.9%, 2014년 7.9%, 2015년 4.5%, 2016년 42.2%, 2017년 7.1%였다. 2019년 비핵화와 남북화해가 선순환적으로 본격화할 경우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도 상승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역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개요 (출처: 통일부)]

북한의 IT & 대학

1. 북한 IT 기술개발

북한은 1960년대 초 '기계공학 발전에 주력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무선공학과 전자공학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를 중심으로 반도체관련 강자가 개설되고 전자계산기 개발집단이 조직되었다. 생산자동화가 강조되던 70, 8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IT 설비 및 기술들을 도입하여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추구했다. 전자공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82년에는 과학원이 독립되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경제난, 폐쇄적 정책 등으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이 크게 저체되자 북한이 대신 주목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다. 북한은 1986년 평양정보센터(PIC)와 1990년 조선컴퓨터센터(KCC)를 설립하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리눅스 기반의 자체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 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6월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과 2004년 6월 '소프트웨어산업법'을 채택하여 IT산업 발전 전략을 법제화하였다.

북한은 인터넷을 해외에 개방하지 않고 정부 관리 하의 인트라넷 속에서 통제된 정보를 기반으로 IT 기술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자체 개발 능력을 가졌고, 세계화 흐름에도 어느 정도 쫓아가며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도	내용
1998	중학교 4학년 이상 컴퓨터 의무교육 실시
1999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 신설
2000	교육성내 프로그램교육지도국, 프로그램지도센터 설치
2001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신설 컴퓨터 수재양성기지 신설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제1·2중학교 등
2002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신설
2003	최천제선대 등 주요대학 IT중심의 학부체제로 개편
2006	금성학원에 컴퓨터 수재반 설치
2009	전국 소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
2009	평양과학기술대학 준공, IT대학원 개설, 2010 평양과학기술대학 개교
2013	평양과학기술대학 전기컴퓨터 공학부 제 1회 석사과정 졸업생 배출

[북한의 IT교육 체계화·제도화 주요 내용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 북한의 IT 인력양성과 대학

북한은 IT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중앙의 소프트웨어 산업 지도기관이 과학 기술 행정 및 교육 지도기관과 연계를 갖고 계획적으로 전문가를 배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북한은 우수한 IT 인재 양성을 위해 1998년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중학생들 중 IT 분야의 수재들은 평양제1·2중학교와 금성학원에서 전문적인 IT 관련 수업과 실습을 한다. 이들은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10여 개의 중앙대학의 정보 관련 학과에 진학하며, 대학들은 연간 5천~1만 명의 IT 실무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199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을 설치한 것이 중요한 계기라 하겠다. 이후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이 신설되었고 이어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이 설치되었다. 북한의 IT기술연구를 주도하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대학들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은 1977년 설립된 자동화학부가 1997년 컴퓨터과학부로 개칭되고 1999년에 단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신설되었다. 북한에서 컴퓨터과학 및 지능정보처리 부문의 교육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음성인식, 문자인식을 비롯한 첨단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며, 특히 암호화에 있어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 대학은 1986년 7월에 컴퓨터센터를 설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1997년 5월에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센터는 3차원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를 비롯, '광대역망 방식의 정보보사 체계', '전자우편체계', '안티바이러스체계', '3차원컴퓨터화상처리도구'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이 기초과학으로서 컴퓨터과학에 교육 중점을 둔다면 김책공대는 응용공학으로서 컴퓨터공학에 중점을 둔다. 김책공대의 대표적인 IT 분야 인재양성 산실은 정보과학기술대학이며 이 외에도 컴퓨터학부, 계산기연구소와 정보센터가 따로 있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고, 총 12,500명의 학생 중 약 10%가 컴퓨터 관련 학부에 재학 중이다. 김책공대 출신은 평양정보센터, 조선



북한은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능력을 가졌고, 세계화 흐름에도 어느 정도 쫓아가며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컴퓨터센터의 IT 인력으로 활용된다. 동 대학의 다국어 문서인식 프로그램 '신동2002'와 팩스통신 프로그램, 사진가공 프로그램, 자료 은폐 프로그램 등은 해외에서도 널리 판매·이용되고 있다.

이과대학 (리과대학)

북한의 KAIST라고 불리는 이과대학은 기초과학 관련 기관들이 집중해 있는 평양시 은정구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 대학의 특징은 철저히 실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수재교육을 위해 1967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분교로 출발하였고 1985년 독립대학으로 발전했다. 제대군인이거나 사회생을 일부 입학시키는 다른 대학과 달리 오직 6년의 초급·고급중학교(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통생이나 조기 졸업한 학생만 입학할 수 있다. 대학과정은 학부와 박사원 과정을 합쳐 7년이며 대학 내 과학정보센터에서는 음성인식 프로그램, 번역 프로그램 등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당에 의해 주로 과학원 등 연구기관에 배치되어 연구활동을 지속한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은 H/W, S/W 기술자를 육성할 목적으로 1985년 전자계산기단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96년 평양컴퓨터기술대학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97년 컴퓨터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명문대로 부

상했다. 컴퓨터와 정보공학에 특성화된 4년제 대학으로, 대학의 학제는 S/W 개발을 다루는 프로그램 학과가 3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4년으로 여타 대학에 비해 짧다. 이는 IT 분야의 경우 전문 기술인력 양성기간을 단축하여 급증하는 관련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주요 IT 기관의 S/W 개발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대학도 군대를 거치지 않은 직통생들로 구성되며 특히 수재학교인 제1초급중학교 3학년을 마친 학생들 중에서 컴퓨터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고급중학교 1학년년부터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이 대학 예비부에서 3년 간 교육한 후 본 학부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2009년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 역시 북한에서 IT 기술을 연구하는 주요한 대학의 하나다. 졸업생들은 웹, 모바일, 데스크톱, 크랙(복사 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사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써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 등 전문 분야를 갖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이 IT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IT 인재들은 유학을 가거나 국가의 IT 연구기관 및 부서에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며 북한의 IT를 이끌어나간다. 또한 해외로 파견되어 고수익의 외화벌이를 담당하기도 하며, 금성학원 컴퓨터반 출신들 중 일부는 해커부대를 담당하는 정찰총국에 의해 선발되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에서 2년 반 동안 공부를 한 뒤 관련 부대에 배치되기도 한다. 북한의 IT 기술역량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의 위협수단으로 주목되기도 하지만 향후 한바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할 경우 남북협력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김종선·이준근, "북한의 IT 산업의 개발 역사와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2015.8)
- 이준근, "공과대학의 발전과 개혁", [북한의 대학 : 역사, 현실, 전망] (2017)
- 이용열, "북한의 IT 인재양성", [ITTA Journal] (2009년 3·4월호)
- 동아일보, "해커로 돌변 가능한 외화벌이 전사들, 북 IT 인력의 위력은..." (2019.1.11.)



영화로 만나는 북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국가로 살아온 탓에 남북 간에는 비극적 현실과 환희의 순간들이 공존해 왔다. 이런 극적인 요소와 가보지 못하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은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최근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영화 <공조>(2016), <강철비>(2017), <공작>(2018) 등은 모두 북한을 소재로 한 것이다. 해외 영화에서도 북한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영화에서 그려지고 상징되는 북한은 다양하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한국전쟁이나 휴전선에서의 군사충돌과 같은 분단의 비극과 대립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념적 색채는 달라졌지만 이런 유형의 영화는 냉전시대에 이례 꾸준히 제작되었다. 다만 <공동경비구역 JSA>(2000), <실미도>(2003),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투 동막골>(2005), <포화 속으로>(2010), <고지전>(2011), <인천상륙작전>(2016) 등은 21세기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분단현실의 모순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5), <베를린>(2013), <연평해전>(2015), <PMC : 병커>(2018) 등에서는 분단의 절곡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들을 소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연관되면서도 자주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영화화 방식은 남북 대립 속에서 존재했거나 존재하리라 상상되는 간첩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인 <쉬리>(1999)부터 <이중간

첩>(2002), <의형제>(2010), <붉은 가족>(2013) 등은 이러한 소재를 다른 전형적인 경우다. 이 소재를 코믹스럽게 다룬 영화 <간첩 리철진>(1999), <그녀를 모르면 간첩>(2004), <간첩>(2012),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는 간첩이란 존재를 무거운 정치소재로서만 아니라 삶과 정치, 개인과 국가 간 긴장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냉철하고 잘 훈련된 간첩 이미지와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방식을 통해 분단의 현실이 일상을 관통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

북한이 영화화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북한의 경제난과 사상통제, 분단의 구조 등으로 인해 개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을 다루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탈북한 사람들의 고난과 갈등, 한국으로의 이주결정에 수반되는 긴장, 그리고 탈북민으로서 정착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 등이 소재가 된다. 영화가 대체로 실화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앞서 소개한 영화들에 비해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기나 인도주의적 관심을 강조하는 특징이 보인다. <국경의 남쪽>(2006), <크로싱>(2008), <무산일기>(2011), <신이 보낸 사람>(2014), <뷰티풀 데이즈>(2018) 등과 같은 영화는 탈북민을 중심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등장한다.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북송과 그 이후의 가족이산의 아픔이 동포 감독들에 의해 영화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졌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2018)의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영화를 중시하지만 사상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선전·선동용 영화가 거의 전부다. 따라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작품성도 겸비한 북한 영화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 국적을 가진 감독들 중에는 북한당국의 허락 하에서 북한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이들도 북한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촬영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와는 다른 장면과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흥미롭게도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허용한 기회를 감독의 독자적 시선으로 변형시켜 만든 작품이 여럿 보인다. 최근의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더 월
(2015)

26회 겔웨이 영화제에서 최고 인권영화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 감독 데이비드 킨켈라의 작품. 한 북한 소녀가 시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의 다규적 영화를 만들고자 북한 당국의 허락 하에 북한에 체류하면서 촬영하였으나 인권의 실상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나오게 되었다.



태양 아래
(2016)

러시아 감독이 북한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영화를 촬영하다 북한 정부의 개입과 조작 과정을 목격하고, 요구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리얼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
(2018)

호주 출신 안나는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선전영화를 만들고자 강력한 선전영화를 제작하는 평양으로 떠난다. 안나는 세계 최초로 북한 영화산업 현장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한다.

New Books



한반도 특강 :
2020 대한전의 핵심현안

저자 : 정세현, 송민준, 이종석, 김준형, 김동업, 박영자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출간일 : 2018. 10. 10

이 책은 남북관계 최고전문가 6명이 말하는 남북관계 핵심현안과 한반도 미래 전망이 담겨있다. 남북관계 격변의 국면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증언, 객관적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링 투 노스 코리아

저자 : 글린 포드
역자 : 고현석
출판사 : 생각의날개
출간일 : 2018. 11. 26

영국 노동당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저자는 북한을 50여 차례 다녀오면서 북한 지도부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근대화과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변영의 미래를 전망한다.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
글로벌 정보화에 비춘 새로운 지평

저자 : 김상배
출판사 : 사회평론아카데미
출간일 : 2018. 12. 3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정보통신망과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등은 북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남북협력의 방식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북한은 처음이지? :
나만 알고 싶은 북한 도시 이야기

저자 : 김정환
출판사 : 라이스메이커
출간일 : 2018. 12. 28

기자 출신의 저자가 지도와 함께 북한의 곳곳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북한 가이드북이다. 평양을 포함하여 북한을 대표하는 13개 도시의 명소 등 각종 지역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인포그래픽과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황 및 통계

2018년 4분기

북한의 시장 환율

(단위 : 북한 원)

기준일자	시장 환율 (1USD)		
	평양	신의주	해산
18. 12. 26	8,500	8,430	8,570
18. 12. 11	8,000	8,060	8,105
18. 11. 27	8,200	8,180	8,200
18. 11. 13	8,190	8,140	8,200
18. 10. 30	8,180	8,160	8,190
18. 10. 16	8,200	8,200	8,250
18. 10. 02	8,220	8,100	8,250

[출처 : Daily NK, "북한시정동향"]

북한 시장 물가와 중국 환율

(단위 : 북한 원 / 괄호 안은 한국원 계산)

기준일자	휘발유 (1L)	디젤유 (1L)	북한쌀 (1kg)	옥수수 (1kg)	중국 1원 환율	비고
18. 12. 24	14,317원 (약 1,878원)	9,720원 (약 1,273원)	4,606원 (약 604.2원)	1,800원 (약 228.6원)	1,245원 (약 163.3원)	
18. 12. 11	14,260원 (약 1,879원)	9,920원 (약 1,307원)	4,340원 (약 572원)	1,800원 (약 228.7원)	1,240원 (약 163.4원)	조사지 양강도와 함경북도 두곳, 물가와 환율 지속 안정.
18. 12. 03	14,765원 (약 1,932원)	9,840원 (약 1,288원)	4,305원 (약 563.5원)	1,800원 (약 225원)	1,230원 (약 161원)	
18. 11. 26	15,795원 (약 2,114원)	9,720원 (약 1,301원)	4,252원 (약 553원)	1,900원 (약 244원)	1,215원 (약 162.6원)	조사지 함경북도와 양강도, 물가와 환율 안정.
18. 11. 19	15,795원 (약 2,106원)	9,720원 (약 1,296원)	4,120원 (약 550원)	2,000원 (약 267원)	1,212원 (약 162원)	조사지 함경북도와 양강도, 연료가격 조금씩 상승. 백미는 2개월 간 약 20% 하락. (가을 수확 백미 시장에 나옴)
18. 11. 12	14,460원 (약 1,956원)	9,640원 (약 1,304원)	4,097원 (약 701원)	2,000원 (약 269원)	1,205원 (약 163원)	
18. 11. 02	13,420원 (약 1,810원)	7,865원 (약 1,060원)	4,114원 (약 554원)	1,800원 (약 243원)	1,210원 (약 163원)	11월 5일 양강도와 함경북도에서 휘발유(15%)와 디젤유 (19%) 가격 급등 (휘발유 15,703원, 디젤유 9,680원)
18. 10. 22	14,640원 (약 1,964원)	8,540원 (약 1,146원)	4,758원 (약 638.4원)	2,000원 (약 268원)	1,220원 (약 163.7원)	조사지 함경북도의 두 곳, 연료비 지난 10일 간 10%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이 원인)
18. 10. 11	13,420원 (약 1,811원)	7,865원 (약 1,070원)	4,719원 (약 642.3원)	2,000원 (약 271원)	1,210원 (약 164.7원)	조사지 양강도와 평안북도, 엄격한 곡물 이동통제로 가격 상승하던 쌀값 9% 하락. 휘발유는 고가 안정
18. 10. 02	13,420원 (약 1,790원)	7,930원 (약 976.2원)	5,181원 (약 699.6원)	1,900원 (약 244원)	1,205원 (약 162.7원)	

[출처 :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언론 보도로 살펴 본 북한 경제 현황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인 '전자상업봉사체계'나 '전자상점'은 평양 제1백화점이 운영하는 백화점 전용 쇼핑몰도 생겨 최근에는 3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이 거래되고 있고, 옥류관에서 파는 냉면도 주문하면 집에서 먹을 수 있다. 식당 예약, 극장은 물론 열차와 비행기표도 살 수 있고, 관광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쇼핑몰은 상품 검색, 바구니에 담기, 전자결제, 구매 예약 같은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오픈 마켓처럼 기업들이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기능도 있다.

[노컷뉴스 - 18. 12. 26]
"북한 인터넷 쇼핑몰, 옥류관 냉면도 주문해 먹는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2017년 북한 GNI는 36조 6310억원으로 남한의 4.5% 규모다. 북한 주민 1인당 GNI로 계산하면 146만원으로 남한의 23분의 1 수준이다. 2016년 3.9% 증가했던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로 감소하였다. 2017년 북한 무역 총액은 55억 5000만 달러로 남한의 5.2% 수준이었다. 주요 무역 국가도 중국이 수출 93%, 수입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편중하였다. 발전 전력량은 235억kWh로 남한의 24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북한 석탄 생산량은 2166만으로 남한보다 14배, 철광석 생산량은 574만으로 남한의 18배 수준이었다.

[중앙일보 - 18. 12. 19]
"북한 주민 1인 146만원 벌어들인 4.3% 수준... 대북 제재로 더 벌어진 南北 경제격차"

2018년 6월까지 20~30만 달러(이하 면적 230㎡)를 유지해왔던 평양의 중심지역인 중구역 및 대동강 주변 아파트 가격이 8월에 5만 달러 이상 하락하였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창천거리나 려명 거리에는 30층짜리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Daily NK - 18. 10. 26]
"부동산 가격 폭락에도 평양 아파트 건설 활발"

신의주에 있는 고급 아파트는 10월만 해도 평균 3~4만 달러로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시 건설 총계획을 지도한 뒤, 대도시 거주 돈주와 권력층이 신의주 개발에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보면 두 달 전에 비해 30~40% 급등한 것 같다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Daily NK - 18. 12. 04]
"개발 총계획 김정은 발표 후 신의주 아파트 가격 폭등"

북한의 공식환율은 2018년 현재 1달러당 북한 돈으로 약 108원이나 암달러 시장에서는 8,000원이다.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무려 80배나 차이가 난다. 평양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4,000원인데, 암시장 환율로는 50센트다.

[월간조선 - 2018년 12월 호]
"장마당에서는 달러로 거래하고 위안화로 거슬러줘"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8년 북중 교역 규모는 23억 9,000만 달러(전년 대비 46.3% 감소)로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1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33% 감소), 수입액은 2억 1,000만 달러(전년 대비 88% 감소)였다.

[한국일보 - 19. 1. 16]
"북중 교역 작년 절반 감소... 중국, 대북제재 이행 명분 확보"

2008년 0.6달러였던 담배(영광)는 종류가 다양해지며 최근 2~5달러로 인상됐고, 5개에 1달러였던 에스키모(아이스크림)는 2개 1달러로 2.5배 올랐다. 봉학맥주는 0.4달러에서 1.22달러가 됐다. 2002년 200원 안팎이던 남자 운동화는 2010년쯤엔 3,000원가량 했고 최근에는 1만원 넘게 거래된다. 두 사람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최소 300위안(43달러) 정도가 필요하며 북한 원으로 환산하면 35만원 안팎의 생활비가 들어간다.

[중앙일보 - 18. 10. 11]
"2002년 200원하던 운동화가 1만원... 북한 생활품 가격 수십배 뛰었다"

평양에서만 볼 수 있었던 택시가 북중 접경도시에서도 성업 중이다. 해산시 시내 운행은 1명에 중국 돈 15~20위안, 우리 돈 3천 원 안팎이다. 쌀 5~6kg을 살 수 있는 부담되는 요금이지만 이용객이 적지 않다. 시내 버스는 길이 산 반면 노선이 부족하고, 운행 횟수도 적은 데다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어 택시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산에서 영업 중인 택시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산 차량이다.

[KBS뉴스 - 18. 11. 10]
"북중 접경 해산에 택시 등장... 요금 비싸도 인기"

2018년 10~12월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합 계
2018년 10월	1	1	1	—	—	3
2018년 11월	1	—	—	1	1	3
2018년 12월	—	—	—	—	1	2

분야	개회 횟수	개회회담	개회장소	내 용	회담일자
정치	2회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평양공동선언 세부 이행방안 및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 7개 사항 합의	18. 10. 15
		남북통신실무회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노후화된 당국 간 통신망을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18. 11. 23
군사	1회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판문점	11월 1일 부 적대행위 중지, 시범적 GP 철수 연내 완료, 한강 하구 공동 수로조사 및 JSA 비무장화 관련 협의	18. 10. 26
경제	1회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매년 시기별 진행,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단계적 추진 등 협의	18. 10. 22
인도	1회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연내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적 실시, 전염병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한 실무적 문제 문서교환 등 협의	18. 11. 07
사회 문화	2회	남북체육분과회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2020 올림픽 공동 진출 및 단일팀 출전 추진,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 서신 공동 제출 협의 등	18. 11. 02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회의(19.2.15) 개최 및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 서신 공동 제출, 1차 회담 내용 관련 실무적 문제 협의	18. 12. 14

[출처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제1회 포스텍·포스리 평화포럼 개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포스텍·포스리 평화포럼'이 출범했다. 2018년 11월 29일 아침 서울 세라론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평화포럼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1세기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부탁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포스텍이 첨단 과학기술연구와 지식공유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밝혔다.

"한반도 2018 :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초발제를 한 이흥구

전 총리는 2차 냉전이 도래하는 시기에 한반도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했다. 20세기 초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구상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화해통일을 선순환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와 남북 경협 전망"을 발표한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와 경제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학자, 전문가, CEO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이 포럼은 반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posco



기업시민 POSCO입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함께
신뢰와 창의를의 문화를 함께
기업시민 포스코가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With POSCO

5년간 5,500명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포스코인재창조원 홈페이지(www.poscohrd.com)를 참조해주세요

